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7월 04일

발 의 자 : 최호정,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76명)

1. 주문

-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 안정이 이뤄져야 함.

그러나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양등을 불러와 대다수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음.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충분한 공급확대가 중산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절실한 실정임.

2. 제안이유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고 공급되는 주택의 품질이 향상돼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재건축·재개발이 속도감 있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개정 노력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 안정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역대 국회와 정부 모두 국민의 주거안정을 핵심적 국가과제로 선정해 왔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양등을 초래해 대다수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또한 토지가격 상승 등을 촉발해 기업에도 큰 부담을 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됐다.

도시화가 거의 이루어진 서울지역은 현실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이외에는 주택공급을 위한 대규모 토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내 저밀도 낙후지역, 도심 역세권,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낡은 공동주택 등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공급 확대 친화적으로 조속히 개편하고 속도감 있게 실현하는 것이 중산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절실한 실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신속공급을 위한 용적률 완화, 높이 제한 완화, 심의 절차와 기간 단축 등의 규제 완화는 주거공급 확대와 함께 도심 재창조를 원활하게 하여, 글로벌 대도시와 경쟁하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민영 및 공영의 공동주택에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공급하는 것도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고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
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내집 마련하
려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국회 등에 대해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거
공급과 도심 재창조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지금보다 단축·간소화하고,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
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 임대주택 및 민영 주택 공급에 있어 주거
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와 정책 시행을 즉각 추진하라.

2022. 7.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